

社說

대학주부의 방북취재 계획

12월이다. 이제 94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빼어없는 해 1995년은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희망을 갖은 지 50년이 되는 동시에 조국 분단 반세기(1945)를 맞이하며, 남한에 모든 민주통일운동력이 통일완전으로 삼은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해방과 통일에 실질적인 분단상태를 맞은 한반도에서 통일운동은 물론 남한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의 하나로서 인식되어 왔다. 특히 남한에서의 통일운동은 남북청년학생교환을 계기로 학살되어 온 수도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90년부터 시작된 방북취재대를 통해 대중의 인식속에 뿌리내림으로써 남한내에서 가장 중요한 민중운동으로 자리잡아왔다.

하지만 우리들이 통일의 원년으로 삼고 협착제 통일운동은 전개해왔던 95년이 바로 연말에 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통일운동의 현주소에 이르게 하는, 여전히 관중들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평범한 대중인식속에서 포괄적으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우리는 조국분단 50년 동안 남과 북의 민족적 이질감이 얼마나 심화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들의 과거를 되짚어 보면 결코 진보도 진취도 없었던 95년이다. 더 진보하고 생각하던 시절, 북한은 '우리'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없는 먼 나라같이 배우고 익혀왔다. 또 우리 이후의 세대들은 어떠한가.

통일이 이르는 과정에서 남북한 모두는

취부적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히는 일에 대해 백전백승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것을 통해 지금까지 외국인과 동질적인 상태의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대학주부는 독일의 통일후 사회 내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는 통일 운동의 이질적인 가치체계를 다산적으로 삼아 남한의 문화적 이질감의 근간이 되어온 교육에 대해 남북대화의 '통일교육'의 상호보완적인 방법론의 제시를 위해 '북한에서의 남한교육, 남한에서의 북한교육'이라는 주제로 방북 취재를 기획하고 있다.

대학주부의 방북취재 계획은 남북경제협력의 확대와 남북간의 관계개선이 어느때보다도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또 통일원년으로 설정되었던 95년을 맞는 시점에서 통일 이후의 한국을 생각하며 남한에서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한반도에서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민족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절제된 통일 이후에 북과 북이 진정한 한민족으로 민족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평등한 이성적인 것이었으면 하는 순수하고 솔직한 대학생들의 눈을 통해 모색해보자는 측면에서 대학주부의 방북 취재는 자본주의의 논리가 앞세워진 단순한 경제협력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세금비리가 뜻하는 것

국가의 존립이 무너져 버렸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각종 범죄의 원인은 지난날 독재정권의 파행적이고 그것만 국가 운영에서 비롯되었음이 반성적으로 지적된 것은 문제들이 더디어 전적으로 그 범죄의 길에 몰려서 갔다. 열거하자면 부패와 권력 투쟁의 많은 일들은 전민통일 운동과 관련하여 문제제기와 해결을 발표하였던 시비를 가려 제재를 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며칠간 다시 우리들을 실의와 분노로 빠뜨린 부패 세력비리사건을 주목하고자 한다.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이 터져 사람들을 경악하게 한 것이 불과 얼마간 되었는가. 이제 정권이 사회가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국가의 발전의 선례는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금비리의 무너진 것이다. 말기에 등장하는 많은 조세들 중에서도 그 사회의 존립기반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세금비리이다. 무너져 가는 사회를 그러저리 막아내려는 노력도 조세제도도 무너져버리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다. 말기에 등장하는 세금을 줄여나가는 것이 세 세상의 지도자가 내세우는 가장 유력한 공약일 수 있었다. 사회가 부패의 만연으로 안양과 방학으로 치달으며 조세제도는 무너지고 권력을 가진 자는 더 탐이 갖기위해 안간힘을 쓴다. 국민자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려고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로써 새로운 세상이란 대안이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나라살림의 기반을 세상에 두

었고 새로운 국가탄생의 첫사건은 세제개혁이라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너무도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동안 우리는 집권층 정권의 소유의 문명화 개혁을 주목하여 왔으며 국민들의 인기도 제법 재충전된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정권이 보여준 모습은 공공연히 규정이 명문화된 말까지 내놓을 할 정도로 국민들을 우롱하여 왔다. 해방 이후 제대로 된 정부 하나 가지지 못했던 정치역사의 부실함을 청산하지 못한 채 새로운 사회, 개혁적 사회란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다. 결국 그 결과로 내리는 국가의 기반을 잃어 두고 아직도 미련한 생각이 공물하는 자세를 보이자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기다려야 할 모양이다. 역사 앞에 겸손하게 과거를 청산하며 그걸 만들 것을 시정하며 새것을 이루려는 사람을 기다려야 할 모양이다.

무너지고 부서지지 않는 건물을 만들고, 비리 아닌 행정과 사업이 없으며, 공공연히 '착취'를 살피는 세상은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퍼져온 권력비리가 누구인가. 그들에게 일말의 배려를 가하지 않고 권력보다 '법'이 앞서는 개혁을 내면 권력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인내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교동분방'을 이야기하였다. 지금 우리는 분방이 아니라 고통을 견딜 수 있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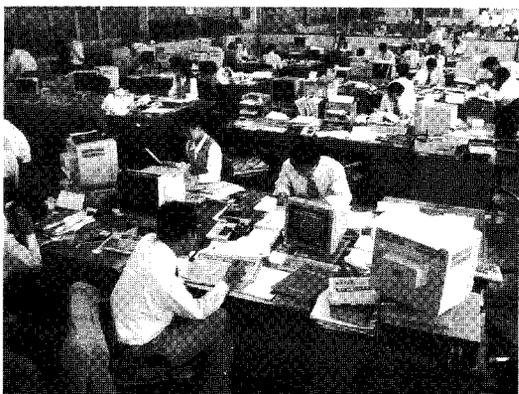
정부, 기술발전에만 급급...사회적 폐해 인식부족 사생활침해 계량화·직업윤리 강화·법률제정 시급

이인희 (신문방송학 강사)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정보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장기적 정보통신 발전계획에 의하면, 2015년까지 초고속 정보통신망(Information Superhighway)의 구축을 완성하고, 이를 통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일반 가일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이란 기존의 동축케이블보다 정보의 전송속도(즉 전송)능력이 월등하게 뛰어난 광섬유케이블을 주축으로 하여 멀티미디어, 즉 PC를 중심으로 한 문자,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통신 기능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종합 정보망의 활용에 필수적인 근거리 정보 하부구조(Information Infrastructure)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말 보기에 이러한 정보화 사회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신장정보경은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정보는 무제한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부정적 요소 고려해야

다에게 다제시대로서 특징지키는 앞으로의 우리 사회에서 정보의 다양화와 중요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민주적인 사회의 창출을 위한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정보 하부구조를 건설하는 일은 정보와 사회의 실현을 위한 열망기초와 정보의 의의의 구체화라고 보겠다. 그러나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입이 언제든, 해박한 보고, 그것의 부정적인 측면을 통찰하고 제어하지 못한다면 정보화사회의 참된 의의는 상실되고 말 것이다. 정부의 정보관련 정책의 방향성이 기술문화적 측면만 강조되고 사회문화적 측면이 경시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언론정보부 요구도 거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사극한 정보관련 정책은 우선적으로 정보사생활권(Information Privacy)을 보호하는 일이다. 얼마전 저주와 사건을 통해 드러난 개인정보의 유출문제는 정보와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중요하게 취급되거나 악용되는 경우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명백화시켜 보여준 것이다. 정부는 사후방문법으로 이 사건의 관련자를 일부로 처벌하는데 그쳤을 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능동적인 정책방안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한국의 규정외에 국제적으로 사용가능한 보장하는 법률은 별도로 없는 실정에서, 정보와 사회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률적 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정보와 사회에서 정보라 지니는 가치된 하나의 경제자원(Economic Commodity)으로서 사용되거나 교환가치를 동시에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상품과 달리 정보의 특성은 아무리 소의여도 소의여지 않고 사실상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악용은 극히 위험한 사회적 침해행위로 분류되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정보와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보급 확산에 못지 않게 국민들의 지속적인 정보의식과 정부의 능동적 정책방안의 강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총생산(GNP)과 유사한 개념으로 국민총 프라이버시 침해(Gross National Privacy Invasion)를 측정하는 일이다. GNP가 경제활동에 의해 하고 계획되는 중요한 지표가 되듯이 GNP는 국민의 정보활용을 의해하고 생활권

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해마다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의 유출 및 유출이 행해졌으며, 정보보완의 감시 및 통계가 가능해지는지 측정하여 통계적으로 판단된다 유용한 국민정보활동 지표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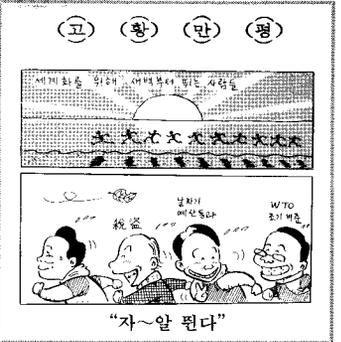
둘째, 정보관련 직업인등의 정보의식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인들이 개

정보를 유출시키거나 남용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무결한 직업의식과 전문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이들의 성숙된 정보의식은 나아가 국민들의 정보능력(Information Literacy)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셋째, 정보 사생활권을 보호하는 법률적 체계이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새로운 상향하는 정보 사생활권 개념을 포괄적으로 흡수하여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전 동의 없이 많은 개인정보의 유출은 어떠한 형태로도 금지되어, 당사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경쟁력 높이는 길

정보기술은 속성적으로 가치 양면성(Ambivalence)을 띤다. 정보기술을 이용하면 사람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순기능을 발휘하기도 하고 역기능을 행하기도 한다. 중요한 점은 정보기술을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성숙된 정보의식과 전문적인 정보의 생산, 분배, 처리 및 거점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발전, 즉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아울러 국민들의 정보 사생활권 보호가 동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정보산업이 국제화되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48면 3색선 정보신문 - 중앙일보가 확 달라집니다.

한국 최초의 「대화평가」, 「국회하원 성적표」
바로 중앙일보가 했습니다.

요즘 중앙일보가 화제입니다.
"중앙일보 확실히 달라졌다!"
생선신문 중앙일보를 읽으신 분들의 찬양글은 끊이지 않습니다. 「대화평가」와 「국회하원 성적표」, 「그때만 만난」 등 화제의 기획기사를 연속적으로 공급하는 시련까지 풀어준 바로... 신문 - 중앙일보는 앞으로 더 깊숙하고 깊이있는 기획기사로 여러분의 앞 권리를 충실하게 지켜드립니다.

중앙일보는 48면 3색선 신문입니다.
종합뉴스에선, 경제대전, 스포츠대전 - 우리나라 최초의 백선신문 중앙일보는 신문의 형식과 내용을 획기적으로 바꾼 전면형 신문입니다. 분야별로 심보를 강화하고 나서는 제와 전문 기자들이 전하는 새로운 각도의 분석기사로, 내용의 깊이와 더불어 시대의 정보신문 - 중앙일보는 정보의 드림입니다.

中央日報社
구독신청: 02)751-5999